

근대문화유산 동국사 '산문폐쇄' 이유는

군산시,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서 동국사 누락 '논란'

국내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주지 종걸)가 일반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산문폐쇄'를 단행했다. 동국사는 설날연휴를 하루 앞둔 1월 29일부터 동국사 신도와 사전 허락을 받은 문화재 연구자 외에는 일체의 관광객과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산문폐쇄 조치로 연휴 동안 동국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사찰 입구에서 발길을 돌렸다.

동국사 산문폐쇄의 표면적인 이유는 밀려드는 관광객을 수용할 시설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지만 속사정은 군산시가 추진하는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에 동국사와 주변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군산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군산시 월명동 365,000㎡의 지역에 총사업비 1,714억 원을 투입해 일제시대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근대 건축물을 매입,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동국사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사찰로 일본 조동종 이치노베 쇼코 스님을 초청해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비를 경내에 건립한 바 있다. 당시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 행사 이후 동국사가 일제의 조선 수탈사를 증명하는 자료 전시회를 비롯해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해왔다. 또 연구자료를 군산시에 제공해 일제당시의 건물 복원 및 당시의 시대상 재현에도 기여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와 문동신 군산시장도 "국내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를 비롯한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론에 홍보해 왔다.

늘어난 관광객에 몸살 앓는 동국사

현재 동국사는 전국적인 명소로 부각되며 평일 500명, 주말 최대 3,000명의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의 증가에 비해 사찰시설 정비는 더디다.

오래된 화장실을 관광객들이 사용하며 잦은 고장과 통파가 이어지고, 경내로 진입하는 관광버스와 쓰레기 처리로 동국사 측은 몸살을 앓고 있다.

한계를 느낀 동국사는 수년전부터 문동신 군산시장과 관련 실국장들에게 문화재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와 관광자원 활성

문화재 보호 CCTV 요청 거절

낙후 화장실·주변 시설에 고충

시 홍보에만 관심... 지원 '無'

동국사 결국 '산문폐쇄' 단행

화를 위해 주차장 확충 및 공용화장실 설치를 요구했으나 군산시는 예산확보를 핑계로 이를 거부해왔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시설정비 요구를 거부당한 동국사 측은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근대역사문화사업에 동국사가 누락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동국사 신도회를 비롯한 지역불자들은 1월 29일 성명을 통해 △근대역사문화사업에 동국사가 누락된 경위에 대한 해명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동국사 측은 동국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와 근대사 자료의 보호를 위



근대문화유산이자 한국불교 유일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는 1월 29일부터 산문폐쇄에 들어갔다. 산문폐쇄의 이유는 군산시가 추진하는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에 동국사와 주변지역이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한 CCTV 설치와 물려드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버스 주차장과 화장실, 도로 표지판 등을 시 측에서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동국사는 이러한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 △동국사가 근대문화재로 포함된 군산시 홍보물의 폐기 △언론보도 시 동국사 언급 배제 △동국사 입장의 군산시 홈페이지 게시 등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지자체 측이 사태를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종걸 스님은 "오죽하면 산문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며 "밀려드는 관광객 때문에 수년째 사찰 환경이 너무나 훼손돼 군산시 측에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시는 지원을 미루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군산시 근대문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동국사"라며 "조성사업에 다른 근대문화재가 모두 포함됐지만 동국사가 누락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더군다나 동국사는 사찰로 신행공간이기도 하기에 문화재보존과 관광사업을 위해서는 다른 문화재보다 더욱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군산시 "정비 나설 것"... 지역불심 싸늘

군산시는 동국사의 강한 반발에 설 연휴 기간 동국사를 방문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2월 4일 동국사를 방문한 군산시 관계자들과 지역 시의원은 "동국사 측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CCTV 설치, 임시 화장실 설치, 도로표지판에 동국사 표기, 2명의 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군산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도 "근대역사경관지구 조성사업의 해당지역이 아직 미정"이라며 동국사와 주변지역이 사업대상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군산시의 이러한 해명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국사를 바라보는 동국사와 지역불교계의 시선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동국사에서 만난 한 불자는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지역에서 교계가 약한 불교계를 하찮게 보고 있는 증거"라며 "그동안 지역에서는 불교계를 무시하는 시선과 종교편향 사례가 많았다.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이 합심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찰재산 처분 '운영위' 필수 결의

조계종 사찰운영위법·시행령 전면 시행

조계종 소속 사찰이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하고 기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종단 해산법안인 '사찰운영위원회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부는 2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법과 동법 시행령 적용안내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종단 소속 사찰은 이달부터 사찰의 예·결산서 제출 및 사찰 예산 외 특별부사와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사찰부동산의 처분(매각, 임대, 사용승낙, 증여, 교환, 담보제공 등) 및 기체 승인 시 반드시 사찰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관련 회의록을 첨부해 종단 총무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찰운영위원회는 주지를 비롯해 스님

과 신도 등 5~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신도 운영위원회는 사찰에 정기적으로 기도금 등이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종단 해산법안인 '사찰운영위원회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부대중의 공의를 통해 종단과 사찰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33대 집행부가 마련한 종단 해산법안 가운데 하나인 이 법은 지난 2012년 제190회 임시중앙총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이듬해 8월 사찰운영위원회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법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조계종은 "의결기구로 격상된 사찰운영위원회는 종무행정과 포교의 실질적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종일 기자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기준 강화된다

문화재청 3일 관련 기준 고시

앞으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시 적격업체 선정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3일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번에 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격업체 선정 시 단순 가격보다 기술 능력과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 적정한 대가 보장을 위하여 낙찰하한율을 현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장문화재 조사의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조사 품질의 저하와 매장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데 따른 보완조치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매장문화재 조사용

역은 특수한 전문적인 분야이지만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며 "이번에 매장문화재 분야에 특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재청은 제도개선 방안과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고고학계,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등과 함께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위원회에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년여에 걸친 연구와 공청회,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이 마련됐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와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신종일 기자

올해 4급 승가고시 일상수행평가 반영

조계종 고시위, 오는 21일까지 접수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3월 7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열리는 조계종 4급 승가고시를 2월 2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4급 고시 출제 경향도 발표했다.

고시위원회에 따르면 눈송문제는 선, 정도, 계율과 윤리, 화엄 등 4개 분야에서 각 1문제씩 총 4문제가 제시되며, 고시 당일 이 중에서 2문제가 출제되며, 응시하는 스님은 출제된 2문제 중 1문제를 선택하여 서술하면 된다.

나아가 올해 4급 승가고시부터 각 기본교육기관에서 평가한 개인별 '일상수행평가'를 승가고시 점수에 반영한다.

신종일 기자

문화재 보수 '자격증 대여' 대거 적발

무자격업체 입건...수석사 대응전 등 사업 155건 추가 조사

문화재 보수 자격증을 빌려 공사에 나선 업체들과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기술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진행한 예산 수석사 대응전(국보 제42호) 등 보수사업 155건에 대한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월 4일 보수기술자 15명과 자격증을 불법 대여 받은 업체 19곳의 대표 등 총 34명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자격증을 대여한 기술자들은 주로 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문화재 관련 협회 이사, 대학교수 등으로 이들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격증 대여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4억 6350만원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승례문 복원 공사 단장을 맡았던 홍창원 단장정도 포함됐다. 홍 단장장은 2013년 7월 군산시 문화재 전문 보수업체인 A종합건설로부터 선금 1500만원과 매월 11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단청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다. 홍 단장장은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3개 업체로부터 총 37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 문화재 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화재 수리업체로 등록하려면 해당 자격증 보유자가 4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수리업체들은 등록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격증 대여기간과 공사기간이 겹치는 예산 수석사 대응전, 순천 송광사 대응전 등 전국의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 155건을 대상으로 무자격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했는지 추가 조사 중이다. 또 2010년 이전에도 관행으로 자격증 대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전국의 문화재 수리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사실 몇십 년 동안 관행이었다. 보수기술자 면허증을 빌려온 대가를 메우기 위해 공사 때 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관련 칼럼 31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환영한다"

조계종 민주본, 5일 환영 논평 발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주본)는 2월 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 대해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본은 "남북은 오늘 5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2월 20일~2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합의되는 즉시 환영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두손 모아 기원한다"고 전했다.

민주본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입장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본은 "이번 합의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원만한 성사됨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남북 대 대화위협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남북불교 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콘크리트 법당!

정밀하고도 엄격한 공정을 거쳐 최고의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흥내는 낼 수 있어도 금(금)과 은(은)의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공포 및 자재는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 시공됩니다.

- ※ 특히 제10-0572820 (사찰의 조립식 공포의 설치방법)
- ※ 특히 제10-0572821 (사찰의 조립식 공포)
- ※ 본 제품은 특허제품이므로 유사하게 만들어 시공하게 되면 특허법 제225조 1항에 저촉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징

- ❖ 화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 ❖ 최소한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 스님께서 직접(직영) 완공하실 수 있도록 자재 및 기술지원 해 드립니다.

외규장각

서명운동

설계(허가)에서 시공(준공)까지

불사완공

현대불교

THE HYUNDAE BULGYO

사찰 목조문화재 '썩고 있다'

백대 끼고 뒤를림 현상 전국 확산 "방역 방충 작업 오히려 훼손" 여론

문화재청 "원인분석 의뢰"

문화재청이 원인과 해충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충 도포사업'에 대해 최근 '방충 도포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방충 도포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충 도포사업은 방충제를 문화재 표면에 도포하여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으로, 방충제 도포 후 1~2년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 문화재청은 방충제 도포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충제 도포사업은 방충제를 문화재 표면에 도포하여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으로, 방충제 도포 후 1~2년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 문화재청은 방충제 도포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 기초

(2)기둥, 창방 및 평방

(3)주두 및 공포 조립

(4)불벽 및 도리

(5)추녀 및 사례

(6)귀포작업

(7)서가래 및 부연

(8)지붕 합작

(9)골조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57-15 (4층)

전화 : 010-5530-6814, 02)494-4890

협력회사 : 신아건설, 신동방건축설계